

전남대·순천대 '예비 글로벌대'... "최종 선정 총력"

전국 15곳... 본지정 평가 최종 10곳
전남대, AI 융복합 혁신 허브 조성
순천대, 특화 분야 강소기업 육성
대전·세종·대구·제주는 모두 탈락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글로벌대30'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 등 15곳이 예비 선정됐다. 광주와 전남에선 각각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선정돼 선방했다는 평가다. 10월까지 최종 10곳을 뽑는 본지정 평가가 남아 있지만, 당초 광주의 경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라이즈)사업에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 출발 전부터 큰 핸디캡을 안았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우승 글로벌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 지정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글로벌대30'은 2026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벌) 30곳 육성을 목표로 학교당 역대 최대인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중앙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를 지원받게 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대 8곳, 사립대 7곳이 예비 글로벌대에 선정됐다.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대 △전남 순천대 △전북 전북대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14개 대학이 신청해 2곳이 선정됐다.

전남대는 인문학 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광주캠퍼스를 인공지능(AI) 융복합 혁신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고 여수캠퍼스는 신기술·첨단산업 혁신 특성화 캠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순천대는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의 3가지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안을 제출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최종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광주, 전남도와 연계한 혁신방안을 구성해 최종 선정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전남대·순천시 등 지자체, 지역 특화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실행계획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전남대와 순천대 선정 소식에 지역 대학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진성 조선대 대외협력처장은 "조선대는 예비 선정 결과에 담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고 올해 제출한 조선대의 계획서 내용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탈락해 아쉽지만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고 입을 모았다.

사·도별 예비 글로벌대 선정을 살펴보면, 강원과 경북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은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경북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동)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가 선정됐다. 경남은 △경상국립대 △인제대 2곳이 뽑혔다. 이밖에 △부산 부산대-부산교대(공동) △울산 울산대 △충남 순천향대 △충북 충북대-한국교통대(공동)다.

이번 예비 지정에서는 대학 108곳이 낸 혁신기획서 총 94건 중 15곳이 뽑혀 경쟁률 6.27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대구·세종·제주는 모두 탈락했다. 특히 대구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임에도 신청 대학 6곳(4건)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시범 지역 신청서 중 7건이 예비 지정됐고 나머지 8건은 모두 라이즈 체계 시범 지역이 아닌 곳들이다.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27곳의 신청서 13건 중에서는 4건이 선정됐다. 국립대 간 통폐합 3건, 국립대와 도립대 간 1건이다. 국립대 간 통폐합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했고 국립대+도립대는 100% 합격했다. 반면 동일 법인 내 통합을 신청하는 등 사립대 간, 사립 일반-전문대 간 공동 신청서는 모두 탈락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광역시·도와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본지정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병하기자

"당신이 군공항 이전지 주민이라면..."

챗GPT에 물어보니 ▶관련기사 3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이지만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 간 돌고구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챗GPT는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20일 챗GPT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의 주민이라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겠는지 물었더니 챗GPT는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

면,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의 개발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들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 생활 스타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주민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며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의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와의 협상대입들은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챗GPT에게 "(이 세 사람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日 오염수 투기 대책 마련하라" 전국어민총회연맹 전남본부 등 광주·전남 2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전남도가 오염수 방류 관련 피해 대책 마련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기자

"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세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공통의 목표 인식, 다양한 대안 탐색, 공정한 협상과 합의점 찾기, 주민 참여와 의사소

통, 전문가의 도움 활용 등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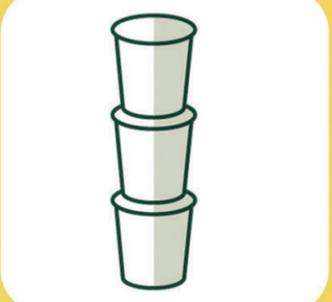
최황지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 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